

전남도민, 일은 많이 하는데 소득은 낮다

전남도 2019년 GRDP 분석 결과

전남도민들은 자본의 역외 유출, 높은 세금,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소득 금액 등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득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전히 농수축산업의 부가가치가 낮고, 제조업은 분사가 수도권 등 타지역에 소재해 지역경제 기여도가 생산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지적됐다.

23일 전남도가 지난 2019년 지역내총생산(GRDP)을 분석한 결과 전남도의 총생산은 76.8조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8위였으나 1인당 생산은 4332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4위로 나타났다.

1인당 생산은 전국 평균(3721만원)을 크게 상

1인당 생산 4332만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4위

1인당 개인소득 1871만원 전국 평균보다 낮은 16위

자본 역외 유출·높은 세금·농림어업 종사자 비율 높기 때문

회하며, 울산(6540만원), 충남(5240만원), 서울(4490만원) 등에만 뒤질 뿐이다.

문제는 1인당 개인소득은 1871만원으로, 전국 평균(2040만원)보다 낮은 16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전남도는 1인당 생산과 1인당 개인 소득 격차의 원인으로 높은 자본의 역외 유출, 높은 세금 비중, 개인 소득의 구조적인 문제 등을 들었

다.

우선 2019년 역외유출액은 13.8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 유출액이 8.1조원으로, 이는 타 시도 주민이면서 전남도내 종사자 4만 9000여 명이 받은 임금이다.

본사 소재지가 수도권 등 타지역에 있으면서 기업소득(영업이익) 역시 7.2조원이 외부로 빠져나갔다.

또 여수, 광양 등 국가 산단 매출 비중이 전체 제조업의 58.9%에 이르며, 이로 인해 이들 기업들이 국세로 7.3조원을 납부했다. 지방세 3.5조원의 2배를 넘어서는 액수다.

여기에 개인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의 비중이 70.4%로 전국 평균(76.3%)에 미치지 못하고, 근로소득 금액도 전국 평균 1740만원보다 크게 적은 136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고령자, 농림어업종사자 등의 비율이 높은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기업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생산활동 지역에 배분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인구 및 대기업 분사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또 과도한 국제 징수액 중 비중이 큰 교통·에너지

자·환경세(3.5조원)의 일부(10%)를 해당지역 지방세(지역지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속 보전하면서 수도권·광역시·도 간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을 재설정하는 방안 등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의 개편을 통해 고소득 일자리 창출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민들의 경제활동이 생산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며 "이를 통해 인구와 기업의 도내로 유도와, 정부가 이러한 전남의 시도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중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23일 오전 시청 행정부시장실에서 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과 상생회의를 갖고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자치구 부단체장 첫 상생회의... 현안 공동대응

자치구별 대표 정책·혁신과제 논의

광주시는 23일 광주시청에서 5개 자치구 부단체장과 제1차 상생 회의를 열고 시와 자치구 간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리로, 앞으로 격월제로 열릴 예정이다.

김중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5개 부단체장이 참석해 자치구별 대표 정책(사업)과 민원서비스 개선 분야, 혁신과제를 공유하고 상생 안건을 논의했다.

자치구 대표 정책으로 동구는 '꼬(꽃)두메' 자원순환 마을 조성, 서구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남구는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 북구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광산구는 '행복으로 걷기' 사업을 들었다.

또한, ▲동구는 우리동네 명예행정관 제도 광주 권역 확대 ▲서구는 광주 통합 모바일 플랫폼 구축 ▲남구는 친절·신속 민원서비스 'Man-to-man' 캠페인 ▲북구는 수요자 중심 '광주하나로' 온라인 민원서비스 운영 ▲광산구는 광주imap 활용한 365 비대면 민원서비스 혁신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3월 열리는 제6차 광주시·자치구 상생 회의의 협의 안건으로는 문화강좌와 비정규직 민생안정 자금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료인력 확보 대책, 학대 피해 아동쉼터 추가 설치 등을 선정했다.

김중효 부시장은 "시의 협조 사항을 전달하고 자치구 건의 위주로 진행한 기존 시와 자치구 간담회 형식을 탈피하고 시와 자치구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소통 창구로서 상생 회의의 틀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5·18 정책연구 민관합동 TF' 출범

5·18 전국화·세계화 토대 마련 민주인권통일단체 전문가 등 참여

5·18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5·18정책연구 TF팀이 출범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정책연구를 위해 시, 시의회, 시교육청, 5·18 관련 단체와 한국인권재단 등 민주인권통일단체 전문가들로 TF팀을 구

성했다.

TF팀에는 전남대 5·18연구소, 5·18기념재단, 광주전남연구원, 인권정책연구소, 통일사회연구소,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의 전문가들이 포함됐으며, 오는 3월25일 온라인으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TF팀은 5·18정신 계승 방법론, 세계 민주인권평화에 기여하는 교류협력사업, 5·18관련 국비사업,

2030년 5·18 50주년 특별사업 등을 주요 연구·기획하게 된다. 또한, 각국의 젊은 세대가 '광주와 5·18'에 호감을 갖도록 하는 전략도 논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TF팀을 상설화해 운영하고 2025년부터는 5·18민주화운동 50주년 특별위원회로 확대·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팀' 체제였던 5·18 부서를 민선 7기 들어 '과' 체제로 승격하고 5·18 선양사업에 주력해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동부 지역민과 소통 행정 협의회 가동

블루이코노미·전남형 뉴딜 홍보

전남도가 동부권 7개 시·군의 현장소통 역할을 할 동부지역 조정자협의회 자문위원 100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소통 행정에 돌입했다.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전남도 정책목표인 블루이코노미와 전남형 뉴딜로 '더 청정한, 더 새로운, 더 행복한 으뜸 전남' 실현을 위한 조정홍

보, 동부권 도민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 방안 모색과 함께 시책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장 먼저 환경산림분야 현안인 '2050년 전남도 탄소중립 추진 원년 선포'와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사업을 지역민에게 홍보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드론운영팀' 운영 재난 현장 실시간 영상 전송

광주소방본부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재난 현장을 소방 드론으로 중계할 수 있는 영상 관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본부는 드론운영팀을 운영하며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드론을 띄워 119 종합상황실과 소방서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한다. 사각지대가 많은 재난 현장에서 입체적 관측과 통합적 지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관의 접근이 어려운 험준한 산악 지역과 수색 범위가 넓은 지역에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화재 19건, 수색 89건 등 108건의 현장에서 드론이 활용됐다.

본부는 매년 드론 조종자 양성 교육을 했으며 현재 55명이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30여명의 조종자를 추가 양성할 계획이다.

신성균 본부 드론운영팀장은 "드론이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의 눈과 손, 발이 돼 줄 것"이라며 "재난 발생 시 동시 출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장에서 드론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2,000

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 살 론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요가·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